



경기도는 이제라도 소통에 나서야...

경기도가 경기지역 신규라디오 사업자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심사를 앞두고 경기도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기고문을 내고 명분 쌓기에 동참했다. 그들의 기고문에는 항상 시민사회단체가 등장한다. 시민사회단체의 뜻을 이해하며 이들과 협력하여 도민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민사회단체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없다. 그냥 실체가 모호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라는 말뿐이다. 소통하지도 않았던 시민사회단체를 표방해 마치 민의를 대신한다는 듯한 태도는 곤란하다.

실제로 2020년 3월 경기방송이 폐업한 직후부터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공동행동,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을 비롯한 140여 곳의 경기시민사회단체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노조 경기방송 지부는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경기도와의 소통을 요구해왔다. 2020년 4월 6일, 2020년 6월 4일 연달아 경기도의 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2020년 가을 해당 상임위를 두 차례 방문했으며 또한 그 해 가을에는 경기방송을 청취해왔던 애청자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기간 내내 경기도는 묵묵부답이었다.

해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작년 4월 경기도형 공영방송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조례제정에 관해서도 일방적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몇몇 조례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며 소통하자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견청취기간에 의견서를 접수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 당연히 현업인들과 언론전문가들의 의견은 묵살되었다.

그동안 경기도가 시민사회단체 및 새로운 999추진위원회에 보인 태도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소통없는 밀실행정’이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경기도형 공영방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만약 이대로 경기도가 사업자에 선정된다면 이제껏 그래왔듯이 그들만의 규칙대로 그들만의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이 들어설 가능성이 더 크게 제기되고 있다. 사업권을 갖기 전부터 보여왔던 모습이 사업권을 가진 다음에는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바란다. 2년 넘게 무임금 투쟁을 하며 우리가 꿈꿨던 경기도형 공영방송은 딱딱한 관료주의에 갇혀버린 방송이 아니다. 도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에게 열린 방송, 소통하는 방송이라는 사업계획서의 문구가 실현되려면 지금이라도 소통에 나서라.

2022. 02. 14.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

